http://www.cerik.re.kr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25호
2017. 9. 4

정책동향

- 2018년 SOC 예산안, 20.0% 감축한 17.7조원
-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정책 과제 Ⅱ

시장동향

- 8월 CBSI, 전월 대비 11.2p 하락한 74.2 기록

산업정보

- 진화된 이미지·비디오 기술을 활용한 현장관리
- 민간투자사업의 부각되는 장점들

건설논단

- 해외건설, 중동을 넘어서야 세계가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8년 SOC 예산안, 20.0% 감축한 17.7조원

– 15년래 최저, 경제 성장 저하 및 지방 균형 발전 저해 우려 –

2018년 예산안, 금년 대비 7.1% 증가한 429.0조원 편성

●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18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본예산 400.5조원에 비해 7.1%(28.4조원) 증가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함(<표 1> 참조).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 확장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SOC 예산안은 17.7조원으로 금년 대비 20.0% 줄어, 사상 최대 감소 폭 기록

● 분야별 재원 배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복지 예산 12.9%, 교육예산은 11.7%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0%나 삭감함.

–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섬.

– 반면, 문화·체육·관광(–0.6조원), 환경(–0.1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0.1조원) 등의 항목이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SOC 예산만은 올해보다 4.4조원, 20.0%나 삭감된 17.7조원으로 책정되어 사상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2013~2016년 정부 예산 12대 주요 분야별 결산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A)	'18안(B)	증감 (B-A)	%
◆ 총지출	400.5	429.0	28.4	7.1
1. 보건·복지·노동	129.5	146.2	16.7	12.9
2. 교 육	57.4	64.1	6.7	11.7
3. 문화·체육·관광	6.9	6.3	△0.6	△8.2
4. 환 경	6.9	6.8	△0.1	△2.0
5. R&D	19.5	19.6	0.1	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0.1	△0.7
7. SOC	22.1	17.7	△4.4	△20.0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0.02	0.1
9. 국방	40.3	43.1	2.8	6.9
10. 외교·통일	4.6	4.8	0.2	5.2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0.8	4.2
12. 일반·지방행정	63.3	69.6	6.3	10.0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08.29).

14년래 최저 수준의 SOC 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급격히 감소할 듯

- 정부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최소화 방침으로, 내년도 SOC 예산을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7조원 이후 14년래 최저치인 17.7조원으로 편성함.
  -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며,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규격의 과잉 설계를 지양하고, 계속사업은 집행 실적 및 투자 성과 중심으로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할 계획임.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세부적으로 SOC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감축되었으며, 특히 도로와 철도의 감소 폭이 매우 큼(<표 2> 참조).
  - 도로 예산은 26.5% 감소한 5조 4,42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을 적극 감축(2.7→ 1.8조원)하였음.
  - 철도 및 도시철도 예산도 34.0% 감소한 4조 7,14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철도 건설 예산도 크게 감축(4.4→ 2.0조원)되었음.
  - 다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삼성~동탄 GTX) 투자(552→ 760억원)와, 안전 예산 중 항만 재해안전(341→ 874억원), 댐 안전성 강화(신규 50억원), 특수교량 안전 대책(신규, 90억원) 등은 증액되었음.

<표 2> 2018년 SOC 예산안 세부 항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A)	2018(B)	증감 (B-A)	%	비고
도로	74,089	54,424	-19,665	-26.5	· 건설(2.7→1.8조)
철도 및 도시철도	71,437	47,143	-24,294	-34.0	· 일반철도 건설(4.4→2.0조)
해운·항만	17,607	17,021	-586	-3.3	· 항만개발 및 관리(1.5→1.3조)
수자원	18,108	16,762	-1,346	-7.4	· 하천관리 및 홍수 예보(1.6→1.5조)
지역 및 도시	12,028	15,536	3,508	29.2	· 도시정책(0.2→0.5조)
물류·항공·산단	28,086	26,272	-1,814	-6.5	· 산업단지(0.5→0.3조)
합 계	221,354	177,159	-44,195	-20.0	△20.0% 감소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08.29).

급격한 SOC 예산 감축, 경제 성장 저하 및 지방 균형 발전 저해 우려 키워

- SOC 분야는 다른 지출에 비해 재정승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데, SOC 지출을 급격히 감소할 경우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지출의 50% 이상을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감축은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의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됨.

박철한(부연구위원·igata99@cerik.re.kr)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최근 동향 정책 과제 II[1)]

– 계획 절차 효율화, 협업 체계 일원화, 디벨로퍼 역할 강화, 기반시설 계획 필요 –

계획 절차의 효율성 제고해야

- 도시재생 사업추진 단계는 복잡한 관문심사 및 평가체계로 인해 과도한 행정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해야 하는 하향식 계획 체계에 머물러 있음.
  – 전략계획이 지자체별 숙원사업, 대상 사업 지역 고유의 잠재력, 주민의 의사 및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활성화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거꾸로 전략계획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계획 행정의 낭비 및 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임.[2)]

협업 체계 일원화 및 통합재생예산 제도 필요

- 부처 간 협업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함.
  – 각 부처별로 사업추진체계가 별도로 작동되고 있으며 필요한 때에 예산 집행이 장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합재생예산 운영이 필요함.[3)]
  – 부처별 중복 투자로 인해 사업 효과가 낮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 발생이 예상됨.
  – 영국의 경우 1994년에 분산된 재원을 통합한 '통합재생예산(SRB)'을 만든 후 2002년 지방의 역할 강화를 위해 통합예산(SB)으로 전환하였음. 미국과 일본도 각각 지역개발 포괄 보조금(CDBG)과 사회자본 정비 종합교부금을 통해 재생보조금 지급 창구를 단일화시켰음.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디벨로퍼의 역할 강화

-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의 참여가 필요함.
  –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에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세밀한

1) 본고는 건설동향브리핑 제624~625호에 걸쳐 연재함. 제624호는 최근 동향을, 제625호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편집하였음.
2) 이영은,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 검토 및 향후 과제", 「성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추진하나?」, 2017.08.11.
3) 황희연,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확립하려면 '도시재생 통합예산' 제도 도입해야", 「나라경제」, 2015년 07월호.

영역에까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비용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지역의 모든 여건을 진단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기는 힘든 실정임.
- 따라서 사업 발굴 및 추진 경험을 갖춘 전문 디벨로퍼의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 디벨로퍼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민간 디벨로퍼의 참여 확대를 기대함.
  - 주택 개발 사업에 치중해 온 공공 디벨로퍼는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계획, 도시설계, 기술·공학, 산업정책, 경영·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일본 야마시타쵸 혼마치도리지구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4]의 민관협력, 현대자동차그룹과 광주시의 청춘발산마을 도시재생사업[5] 등과 같이 민간 영역의 창의와 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역할은 공공성을 위한 지원 및 감독으로 한정하고 민간 디벨로퍼가 사업모델의 발굴·수립, 재원조달, 운영·관리를 주도하는 영국의 "디벨로퍼 주도형(developer-driven)" 도시재생 사업 방식[6]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7].

정교한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 대규모의 물리적 개발이 수반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종합적이고 정교한 기반시설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공간과의 기반시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마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시설 위주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과 더불어 기존 기반시설의 노후화 수준을 평가하고, 보행 접근성,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의 개량 및 확충이 필요함.
  -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의 재생"이 수반되어야 함[8].

-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계획 및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이 활력을 되찾고 관련 일자리 창출도 도모해야 할 것임.

김천일(부연구위원 · ckim@cerik.re.kr)

4)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경제기반형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15, p. 101.
5) "현대차그룹-광주, 도시재생사업 결실.. '청춘발산마을' 오픈", 파이낸셜 뉴스, 2017. 06. 22.
6) 영국 포츠머스(Portsmouth) 건와프(Gunwharf) 항만 도시재생의 경우 버클리 그룹(Berkeley Group)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Jones, P. and Evans, J., 2008, *Urban Regeneration in the UK*, SAGE, pp. 71-72 참조).
7) 한슬기·김정빈, 2016, 도시재생사업 내 민간 비즈니스 참여와 역할, 「서울도시연구」, 17(3), pp. 25-44.
8) "[시론] 도시재생의 축은 도로재생이다.", 건설경제, 2017. 0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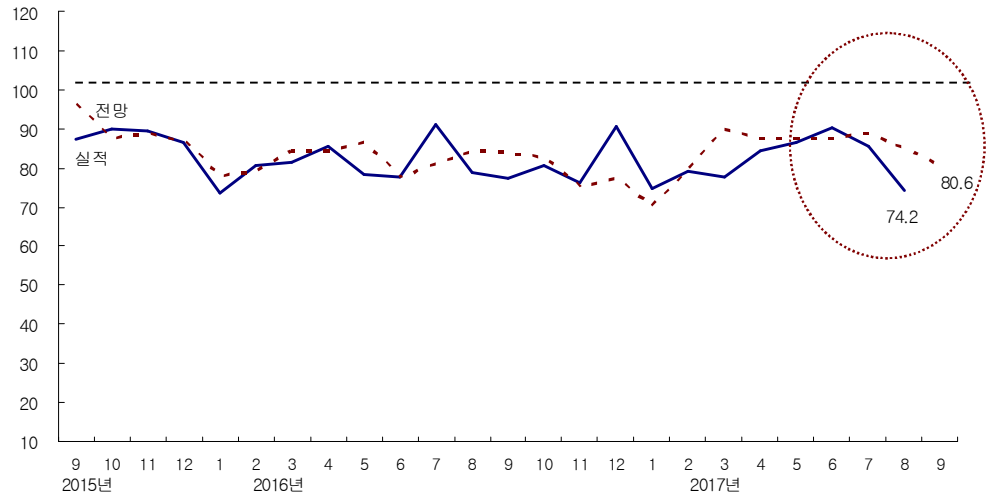
8월 CBSI, 전월 대비 11.2p 하락한 74.2 기록

-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형 및 서울 소재 기업의 지수 하락 두드러져 -

8월 CBSI, 전월 대비 11.2p 하락한 74.2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2017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1.2p 하락하며,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인 74.2를 기록함(<그림 1> 참조).
  - CBSI는 지난 6월 90.4로 작년 12월(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7월에 5.0p 하락하고, 8월에도 11.2p 하락하였음. 이는 지난 2016년 1월에 73.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함.
  - 8월에 혹서기 공사 물량 감소로 지수가 하락하는 계절적 요인이 일부 있으나, 지수가 10p 이상 감소한 것은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감소 폭이 큰 편임.
  - 이는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2~3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이 급격히 둔화 되었는데, 결국 8.2 대책이 CBSI 지수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8월 29일 올해 보다 20.0%나 감축 편성한 2018년 SOC 예산(안) 발표도 지수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 및 서울 기업의 지수 하락이 두드러져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과 중견기업 지수가 하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7.4p나 급락한 64.3을 기록, 지난 2010년 8월 50.0 이후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6.2p 하락한 76.9를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1p 상승한 71.7을 기록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급격히 하락(-17.1p)하였으며, 지방도 소폭 하락(-2.4p)하였음.
  - 서울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7.1p 하락한 89.8을 기록함.
  - 지방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70.3을 기록함.

<표 1>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6년 10월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 합		80.7	76.1	90.6	74.7	78.9	77.5	84.2	86.6	90.4	85.4	74.2	84.9	80.6
규모별	대형	100.0	84.6	100.0	84.6	92.3	92.3	100.0	100.0	100.0	91.7	64.3	91.7	78.6
	중견	78.8	75.8	90.6	77.4	71.0	74.2	74.2	87.1	89.3	92.9	86.7	85.7	83.3
	중소	60.4	66.7	79.6	60.0	72.3	63.8	77.1	70.2	80.4	69.6	71.7	76.1	80.0
지역별	대형	91.3	79.2	98.2	81.3	85.1	86.7	89.6	95.2	93.8	94.0	76.9	89.8	78.2
	중소	64.9	71.6	79.9	64.8	69.8	64.3	76.4	73.7	85.0	72.7	70.3	77.6	84.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년 9월 전망치, 8월 실적치 대비 6.4p 상승한 80.6

- 2017년 9월 CBSI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6.4p 상승한 80.6을 기록함.
  - 9월에는 혹서기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9월 전망치는 이러한 계절적 영향이 반영될 결과로 판단됨.
  - 비록 8월보다 지수가 개선되지만, 여전히 기준선(100) 미만이고 80선 초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은 9월에도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진화된 이미지·비디오 기술을 활용한 현장관리

- 효율적인 현장 품질관리를 가능케 할 실사 기반의 가상 투어 기술 -

건설현장으로 확대되는 360° 이미지 및 비디오 기술

- 360° 이미지 및 비디오 기술은 기존 2D 이미지에 비해 정확하고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여 줄 수 있어 건설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기술은 주로 부동산 및 호텔산업에서 각광받았으나,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건설산업의 활용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 3D 카메라를 사용, 건설현장의 2D 이미지를 여러 장 결합하여 3D 형태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구글(Google)이 제공하는 온라인 3차원 사진 지도 서비스인 구글 스트리트 뷰(Google Street View)의 진화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 기술은 3D 스캐닝과 유사한 효과를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그리고 별도의 전문지식이 없이 시설물의 행태를 3D로 구현할 수 있음.
  - 정확도 측면에서 최근의 기술 개발에 따라 오차율 1% 이내로 3D를 구현할 수 있으나, 아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멀티비스타(Multivista)사의 Site-Walk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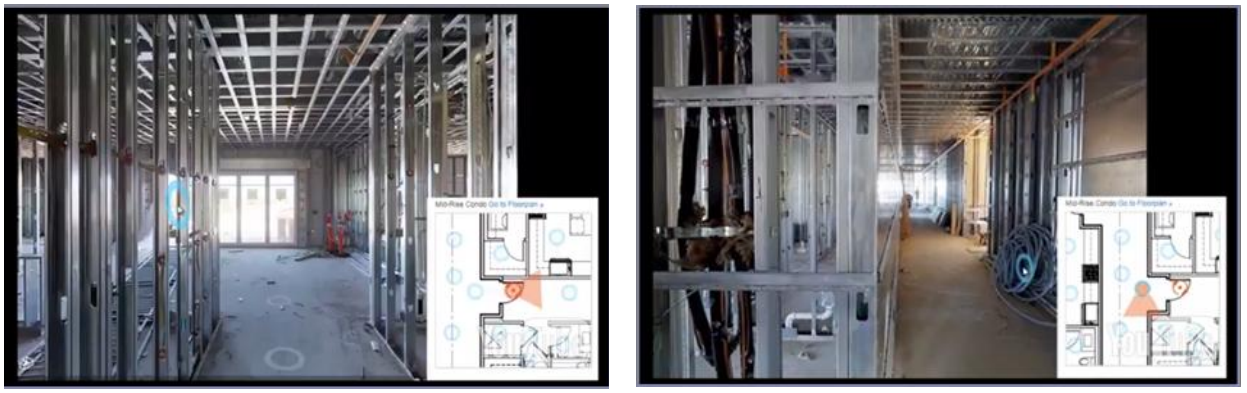
- 멀티비스타(Multivista)사는 건설현장의 사진, 비디오, 웹켐 관련한 문서관리 서비스를 전 세계 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회사임.
  - 웹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이미지 및 비디오 문서를 언제든지 접근 가능케 함.
  - 최근에는 전통적인 이미지 문서관리 뿐만 아니라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기(UVA)를 활용한 이미지 정보 관리, 3D 현실 캡쳐(3D reality capture)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Site-Walk 360°는 멀티비스타사의 3D 현실 캡쳐 서비스의 핵심으로 건설현장 사진을 기반으로 3D 가상 워크스루(3D virtual walkthrough)를 현실감 있게 제공함(<그림 1> 참조).
  - Site-Walk 360°는 몰입형 미디어 기술(immersive media technology) 전문회사인 메타포트

(Matterport)사와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건설현장에 고화질 3D 가상 워크스루를 구글 스트리트 뷰와 같은 형태로 현실감 있게 재현함.

- 이 기술은 크게 2D 도면과 3D 비디오로 구성되며, 사용자는 2D 도면에서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현실감 있게 점검할 수 있음.

<그림1> Site-Walk 360°의 3D 가상 워크스루 예시



자료: 멀티비스타 홈페이지(http://www.multivista.com/services/3d-reality-capture).

- 이 가상 투어 기술은 진화된 이미지 캡처 기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 BIM 모델에서 제공하는 3D 가상 워크스루와 비교하여 실사 기반의 워크스루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현실감 있는 현장 정보를 경험할 수 있음.
  - 사무실에서 누구나 가상 투어를 통해 건설현장을 쉽게 점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2D 혹은 3D 설계 도면과 비교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가능케 함.
  - 현장에서 조사하기 힘든 복잡한 형태의 시설물을 쉽게 캡처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 진행 보고나 외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이미지 및 비디오 정보를 활용한 문서관리의 미래

- Site-Walk 360°와 같은 이미지 기반 문서관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 등의 신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현장 품질관리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드론에 장착된 360° 카메라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3D 스캐닝 기술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3D 이미지로 구축된 메쉬(mesh)나 포인트 크라우드(point cloud) 형태의 3D 데이터가 BIM 모델로 자동 전환되고 오차를 파악할 경우 현장 품질관리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최수영(부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민간투자사업의 부각되는 장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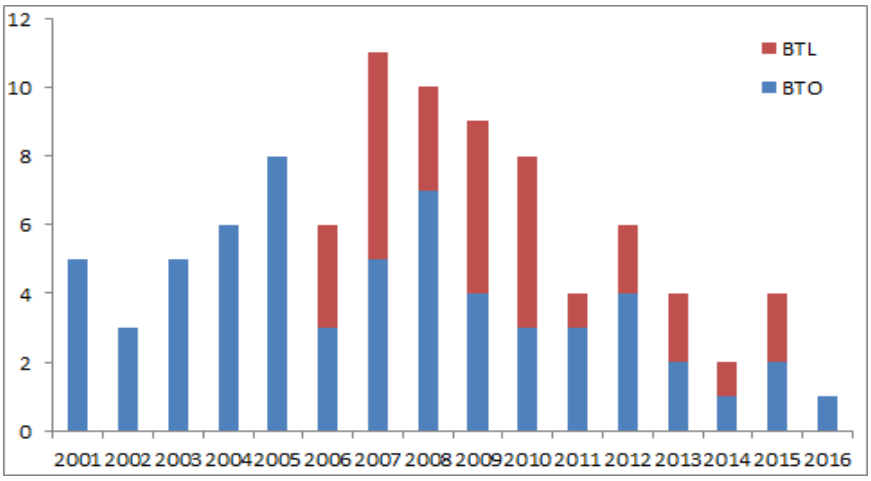
- 전통적인 공공조달 대비 계약 이행 측면에서 우수 -

국내외에서 민간투자사업 규모 축소 경향이 관찰됨.

-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인 국가의 영역이었던 사회기반시설의 공급과 운영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 건설, 운영 등 전생애에 걸쳐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됨.
  -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 국채 대비 적정한 조달비용, 재정사업 시설물 대비 민자사업 시설물에 대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이용료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최근 국내외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축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11조원에 달했던 국내 민자사업 실시협약 규모가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해, 2016년에는 2조원 수준까지 하락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 국내 민간투자사업 규모[1] 추이



자료: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 세계은행의 "2016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Annual Update"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인프라 개발사업이 139개 저소득

1) 실시 협약이 체결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임. 이 규모에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총사업비 2천억 원, 국고지원 3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됐음. 사업규모 단위는 조 원임.

및 중위 소득 국가에서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12년을 정점으로 규모와 건수 모두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2].

- 원유가격의 하향세 유지와 그로 인한 산유국의 재정문제가 초래한 중동지역의 발주물량 축소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을 민간투자사업 중심으로 수정하려는 동향이 관찰됨.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한 대학교가 전통조달방식(Design-Bid-Build)과 민자사업방식을 비교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음[3].

미국 시라큐스대학의 민자사업 방식과 전통조달방식 비교 연구

● 2017년 4월에 발표된 위 보고서는 미국의 입법자들에게 민자사업 방식의 이점과 효능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민자사업 참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전통조달방식에 대한 민자사업 방식의 장점을 분석하고 있음.

- 민자사업 방식이 사업주, 정부, 대주단 간 위험의 효율적 분담과 이전, 이행기간과 계약금액 준수의 확실성 제고, 혁신적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밝힘.
- 민자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투자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이 증가하고, 종류별로는 교통, 병원, 학교, 수리시설 등의 공급과 운용에 보다 효율적인 조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민자사업 방식의 장점 활용 필요

●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노후 인프라로 인한 국민안전의 위협,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민자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되는 재원을 현세대에게만 부담시키는 대신 사회기반시설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부담하게 하기 때문에, 당장 정부의 지출 규모를 크게 증가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임.
-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과 유지에 민간의 혁신적 창의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2) 참조: 빈재익(2017), “세계은행, 2016년 해외투자개발사업 동향 발표”, 건설동향브리핑 621호,
3) Syracuse University(2017), “Public-Private Partnerships: Benefits and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건설논단

해외건설, 중동을 넘어서야 세계가 보인다

2017년도 마무리를 넉 달 남짓 남겨 놓은 8월 15일 현재 해외건설 수주액이 176.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작년 동기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이다. 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10년간 최저치였던 작년도 수주실적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생각에 한자리 수 증가율에도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그런데 금년도 해외건설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무작정 반가워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금년도에 증가한 해외건설 수주물량이 모두 중동한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라는 점이다. 금년 1/4분기에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며 다소 상승세를 보였던 유가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70%의 수주 증가율을 기록한 중동을 제외하면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해외건설 수주액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난 십수년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한계로 중동 지역과 플랜트 공종에의 편중성을 지적하여 왔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주 증가로 제2의 성장기를 구가했던 90년대 말을 제외하면 우리 해외건설은 유가의 등락에 따라 수주가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유가의 등락은 곧 해외건설 등락으로 연결되어 해외건설 수주액도 큰 폭의 부침(浮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침은 결국 해외건설 호황 시 구축된 인력기반과 네트워크가 유가의 하락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나 단기간에 패러다임을 바꾸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OPEC국가들의 감산합의나 미국의 셰일오일 동향에 기대서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진정한 플레이어(Player)가 될 수 없다. 이제 단순히 해외건설 수주액의 단기적인 증감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던 것에서 벗어나자. 문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수주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해외건설의 선두에 나서는 기업의 전략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지원정책과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도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중동을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 아이러니 하게도 그것이 곧 우리의 텃밭인 중동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디지털 타임스, 2017. 8.18〉

김민형(선임연구위원 · mskim@cerik.re.kr)